

핵폐기장 대책, 영광과 한수원에 떠넘겨서야

산자부 고준위 핵폐기물 처리 로드맵에 지역민 부글부글

8년 뒤면 포화 한빛원전에 저장시설 확대 추진 “왜 폐기물 계속 쌓나... 영구처리장 안된다” 반발

“2035년 이후 계획밖에 없다. 당장 2024년이면 한빛원전은 사용후핵연료(폐연료봉) 저장공간이 꽉 차는데...”, “정부가 지역과 한수원에 갈등의 뇌관을 떠넘긴 것이 아니냐”, “왜 자꾸 영광에 위험물질을 차곡차곡 쌓나”

25일 정부가 사용후핵연료 즉 고준위 핵폐기물 관리를 위한 중장기 로드맵(안)을 발표하자 원자력 전문가, 지역 주민 사이에선 비판과 우려가 쏟아졌다. 영광 주민들은 “정부가 발전소에 짓는다는 단기적

저장시설이 영구적인 핵폐기장으로 전락하는 것 아니냐”면서 반발을 예고했다.

산업자원통상부가 내놓은 계획안에 따르면 이르면 2035년 중간저장시설이, 2053년에 영구처리장이 건립·가동 예정이지만 영광 한빛원전의 경우 이보다 최소 11년 앞서 사용후 핵연료 저장공간이 포화된다.

하지만, 정부 로드맵과 산업부 관리들은 “불가피할 경우 발전소 부지 내에 단기적인 저장시설을 설치한다”는 원론적인

답변에 그치고 있어 주민에게선 불안과 불만의 목소리가, 전문가 사이에선 ‘무책임한 정부’라는 비판이 나왔다.

정부 로드맵에는 발전소 내에 어떻게 어떤 규모로 시설을 건설한다는 것인지 구체적인 내용은 없고, 주민 수용성(동의)과 안전에 힘쓰겠다는 원론적 내용만 담겼기 때문이다.

산업부도 “나머지는 발전사업자인 한국수력원자력과 주민들이 알아야할 숙제로, 더 이상 구체적인 정부 발표는 없을 것으로 안다”고 밝히면서 마치 ‘뜨거운 감자’이자 갈등의 뇌관을 정부가 지역과 한수원에 떠넘기려 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영광지역 시민사회단체 연합체인 한빛원전 범국민대책위원회 주경재 집행위원장은 “정부의 이번 발표는 사실상 발전소

부지 내에 영구적인 핵폐기장 건립을 위한 수준이 아닌가 싶다”면서 “영광 뿐만 아니라 전국 단위의 힘을 하나로 결집해 맞서겠다”고 강조했다.

한수원 출신의 원자력 전문가 한병섭 박사는 “정부 안을 아무리 뜯어봐도 당장의 계획이 없다. 2024년 한빛원전 사용후핵연료 저장공간이 포화하는데 정부는 장기적인 장밋빛 전망만 내놓고 2035년 이전의 문제점은 회피해 버렸다”면서 “발전사업자인 한수원과 지역 주민이 알아서 싸우라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원자력안전과미래 대표 이정운 기술사(기계공학)도 “정부 정책은 완성도를 떠나 지역은 물론 국민 여론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고 마련된 결과물”이라며 “발전소 부지 내에 불가피하게 건설하게 될 단기 저장시설은 반드시 주민이 동의할 수 있는

수준의 설계, 시공, 운영, 환경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가 이날 내놓은 고준위 핵폐기물 관리방안 수립에 참여한 원자력 전문가 등에 따르면, 한빛원전에 건립 예정인 핵폐기물 단기 저장시설은 지상에 들어설 것으로 보인다. 원자로 격납용기처럼 콘크리트가 가장자리를 둘러싸고 그 안에 철제용기가 겹겹이 에워싸인다. 핵연료를 최소화하기 위해 사용 후 핵연료는 불활성가스(헬륨)와 함께 저장된다.

이와 관련 김규태 동국대 원자력공학과 교수는 “중간저장장 건립 전까지 발전소 부지 내에 10여년간 보관하게 될 저장시설은 테러의 위험에 걸릴 정도로 안전하고 합리적으로 건설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영광=이종윤기자 jlyee@

담양군수 명의 축제 상금 선거법 위반 여부 조사

담양군이 축제 행사 중 ‘담양군수’ 명의의 상금을 지급해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법 저촉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25일 전남도선관위 등에 따르면 담양군은 지난 3일 대나무축제 개막에 맞춰 열린 군민의날 행사에서 세부 프로그램별로 상금을 지급했다. 장기자랑, 참여도 등을 심사해 등수별로 50만원, 30만원, 20만원 등 모두 300만원이 읍·면장 등에게 지급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상금 봉투에 ‘담양군수’라고 적혀 선거법 위반 논란이 일었다.

담양군 관계자는 “실무자가 선거법 저촉 여부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시상을 한 것 같다”며 “군수는 총합적인 결재만 할 뿐 시시콜콜한 내용은 잘 알지 못한다”고 해명했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상무금요시장 노점상-공무원 충돌

철제 울타리 공사 놓고 몸싸움 서구 내일부터 과태료 추진에 대규모 집회 예고 맞붙 갈등

광주 상무금요시장 폐쇄를 놓고 서구청 공무원과 노점상이 충돌했다. 도심 한복판에서 20여년간 매주 금요일이면 열렸던 노점시장 폐쇄에 나선 서구청 공무원과 이에 맞서 상권을 지키려던 노점상 간의 갈등이 몸싸움으로 번진 것이다.

노점시장 폐쇄 수순으로 이주 금요일부터는 상인 1명당 최고 150만원의 과태료를 물리려는 서구청에 맞서려고 노점상들이 민주노점상전국연합 회원들과 연대해 오는 27일 대규모 집회를 예고하면서 갈등이 커지는 양상이다.

원의 과태료 부과 등 금요시장 상인들에 대한 행정조치를 추진하겠다고 방침을 세우면서 충돌은 재연될 전망이다. 또 시공업체 측에서 누군가 일부러 울타리를 훼손한 것 같으며 경찰에 진정을 넣으면서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된 금요시장 상인들이 반발을 예고하고, 공권력에 건주 상대적으로 힘이 부치는 상인들이 전국단위 노점상연합 회원들과 연대해 투쟁을 선포하면서 갈등 요인은 점차 늘어나고 있는 모양새다.

광주 서구 관계자는 “시민 불편을 이유로 노점 상인들에게 인근 상무시민공원으로 옮겨갈 것을 수개월간 요구했지만 꿈쩍도 않고 있다. 시장 폐쇄로 방침을 세운 만큼 충돌을 피하려고 일부 늦춰지긴 했지만 중간에서의 타협은 없다”고 말했다.



25일 오전 광주 서구 치평동 성당 앞에서 인도에 철제 울타리를 설치하려는 서구청 공무원과 이곳에서 금요일이면 좌판을 펴고 장사해 온 노점상들이 몸싸움을 벌이는 등 대치하고 있다. 구청 측은 보행자 안전을 위해 공사에 나선다는 입장이지만, 상인들은 자신들을 몰아내려는 수순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이에 대해 노점상인 양선미(여·59)씨는 “상무지구라는 말이 생기지도 않은 20년 전부터 이 자리에서 호떡을 팔고 채소를 팔아왔다. 상인들도 큰 욕심 안 부리고 주민들이 호응해줘 광주에서 자랄할 만한 시장으로 컸다”면서 “주민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끝까지 우리의 자리를 지켜내겠다”고 말했다.

광주 최고의 도심으로 꼽힌 상무지구 한복판에는 이곳에 대형 마트도 들어서기 전인 지난 1996년부터 금요시장이 열렸다. 농산물, 의류 등을 파는 상인 250여명 가운데 일부는 서구청 단속을 피하려고 인근 공원으로 옮겨갔지만 대다수 상인들은 자신들이 키워온 상권을 지키려고 지금의 자리를 지키고 있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이들은 동료 병사들의 진술이 있었다”고 덧붙였다. 유족은 이어 “선임병들이 30쪽 분량의 업무지침서와 전화번호를 암기하게 하고 시험을 보겠다며 정신적인 가혹행위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A이병의 유족은 아들이 숨진 당일 오전 기상 뒤 2시간여 만에 발견된 점에 대해서도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제1전비 관계자는 “유족들이 의혹을 제기한 부분에 대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며 “신병관리 체계가 부실한 점에 대해서도 조사를 병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공군병사 자살’ 유족들 인격 모멸·언어 폭행 의혹 제기

자대 배치 10일 만에 공군부대에서 한 병사가 숨진 것과 관련, 유족들이 ‘인격모멸·언어폭행’ 의혹을 제기하며 군 당국의 철저한 조사를 요구했다.

25일 공군 제1전투비행단(이하 제1전비)과 유족들에 따르면 지난 12일 오전 9시55분께 광주시 광산구 제1전비 생활관 화장실에서 이등병 A(23)씨가 숨져 있는 것을 동료가 발견했다.

A이병은 지난 2월15일 입대해 군사기초

훈련을 마친 뒤 4월26일 제1전비에 전임했고, 1주일간의 신병교육을 거쳐 지난 3일 사무실 배치를 받았다. 지난 5일 연휴 휴가를 받아 가족과 보낸 뒤 7일 복귀했다.

A이병은 부대 복귀 6일, 사무실 배치 10일만에 화장실에서 목매 숨진 채 발견됐다.

A이병의 유족은 “아들이 간부들의 폭언에 힘들어 했다”고 주장했다. 또 “아들이 전화응대 미숙으로 자주 혼났으며 한 간부로부터 모멸감을 느낄 정도의 폭언을 들었

다. 동료 병사들의 진술이 있었다”고 덧붙였다. 유족은 이어 “선임병들이 30쪽 분량의 업무지침서와 전화번호를 암기하게 하고 시험을 보겠다며 정신적인 가혹행위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A이병의 유족은 아들이 숨진 당일 오전 기상 뒤 2시간여 만에 발견된 점에 대해서도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제1전비 관계자는 “유족들이 의혹을 제기한 부분에 대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며 “신병관리 체계가 부실한 점에 대해서도 조사를 병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완도 노인 살해 용의자 증거 불충분으로 석방

완도에서 발생한 80대 노인 사망 사건의 살인 용의자로 지목된 이웃 주민이 증거불충분으로 풀려났다.

25일 완도경찰에 따르면 김모(80)씨의 살해 용의자로 지목돼 긴급체포한 A(70)씨를 지난 21일 석방했다.

김씨는 지난 16일 오후 4시40분께 완도군 금일읍 자택 안방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오락가락하는 진술, 사건당일 부정확한 행적, 시신이 발견된 날 김씨와의 두 차례 통화내역 등을 토대로 A씨를 이번 사건의 유력한 용의자로 특정해 지난 19일 긴급체포했다.

하지만 경찰은 A씨의 살인 혐의를 입증할 만한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고, A씨도 혐의를 완강하게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완도=정은조기자·서부취재본부장

SKT 명예회장 성추행 ‘물’의

SKT 명예회장인 카페 여종업원의 다리를 만지거나 어깨를 주무르는 등 강제 추행했다는 고소장이 경찰에 접수.

○SK그룹의 대표적인 전문 경영인으로 전경련 명예회장을 역임하기도 한 손 회장은 경찰에서 “당시 상황이 구체적으로 기억나지는 않지만 이런 일이 일어난 점에 대해 매우 송구한 마음”이라고 설명.

/연합뉴스

노대지구 3층 상가 건물매매

노대동 광주은행 코너자리

◆ 토 251평, 건 431평

◆ 상가밀집지역, 아파트 밀집지역

1층 (상가 8칸)
2층 (상가 4칸)
3층 (원룸 8개, 투룸 5개)

□ 보 1억 6천, 월 1,500만

□ 매가 → 28억

010-6670-9800 010-7384-7800

법률경매 (특수물건 추천)

동구 동명동 (8층상가 오피스텔) → 토 211평, 건 606평 → 요양병원 추천, 주차 원비, 4차선 도로 접 → 법원조대 부근, 임대걱정 없음 □ 감정가 19억 5천 - 최저가 13억 7천	북구 운암동 (5층 상가 건물) → 토 66평, 건 194평 → 지하음식점 1층~3층 (전71㎡) 4~5층(사무실) → 운암동 공구의거리, 광고효과 좋음 □ 감정가 7억4천6백 - 최저가 5억9천7백
서구 양동 (숙박 시설) → 토 174평, 건 424평 → 1층 (주차장,기운터) 2층~5층 (숙박시설 40개) → 광주은행 동쪽 인근, 약 10m 도로접 □ 감정가 10억 8천 - 최저가 4억 8천	북구 매곡동 (4층 상가 상가건물) → 토 223평, 건 381평 → 1층 (식당) 2층~3층 (학원) 4층 (사무실) → 주변 아파트 단지, 4~5m 진입로, 주차원비 □ 감정가 12억 - 최저가 9억7천2백
담양 (전원주택) → 토 146평, 건 18평 → 금성중학교 인근, (주변 식당,전원주택지) □ 감정가 6천 2백 - 최저가 6천 2백	남구 주월동 (5층 상가건물) → 토 103평, 건 380평 → 1층 (사무실) 2층~5층 (학원,사무실) → 재석중학교 부근, 아파트,상가 밀집지역 □ 감정가 7억9천6백 - 최저가 5억5천7백

경매교육
경매 이제는 대중화시대!!

실전 교육 듣고 바로 수익창출 가능

□ 매주 수요일 (오전)

□ 입학부터 임대, 매매, 개폐기회까지 (원스톱 강의)

☆ 경매 실전 교육 ☆

바로 실전으로 수익창출 하실분!!

특수물건, 유채권, 가정법원권, 경매입찰, 등 실제 경험, 가장 중요한 실무교육 합니다.

(주) 대신경매

직원구합니다.

부동산, 경매 배우실분.

부동산 자격증오신분

부동산 경매 관심 있으신분

가족처럼 일하실분 환영합니다.

062-511-7800 010-6832-9700